

# KINU

제1차 KINU 통일포럼(2014.4.30)

##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제1차 KINU 통일포럼(2014.4.30)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인 쇄 2014년 6월  
발 행 2014년 6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02-2285-0936)

© 통일연구원, 2014

#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  
제1차 KINU 통일포럼

발간사 .....	vii
요약 .....	ix
I. 서언 .....	1
II. 「드레스덴 구상」의 배경과 의미 .....	3
1. 「드레스덴 구상」의 배경 .....	3
2. 「드레스덴 구상」의 의미 .....	10
III. 「드레스덴 구상」 추진 방향 .....	14
1. 기본 방향 .....	14
2. <3대 제안> 실천방안 .....	20
IV. ‘행복한 통일’ .....	31
1.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	31
2. 통일비전과 국민행복 .....	35
V. 결언 .....	37
부록: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전문 .....	3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59



# 발 간 사

본 보고서는 2014년 4월 30일 개최된 제1차 KINU 통일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KINU 통일포럼은 통일연구원이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롭게 기획한 브랜드입니다. 동 포럼은 통일연구원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정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드레스덴 구상』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의 본격적 가동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본 보고서는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것입니다.

제1차 KINU 통일포럼에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각계 전문가들과 본 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 수정·편집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6월  
통일연구원장  
최진욱



## 요 약

『드레스덴 구상』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천명한 대북정책 및 통일 정책의 구체적 실천 과제로서 정책의 일관성과 실천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통일을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대북·통일정책의 목표를 위해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모자 패키지 (1,000 days) 사업,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 남·북·러 협력 사업, 남·북·중 협력 사업, ‘민생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다.

특히, ‘민생 인프라’ 구축은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 기반 구축의 일환이다. 이는 북한 주민의 절박한 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통일준비 차원에서 남북공동체 형성은 물론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대한민국의 활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의 호응 유도를 위해서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축산 분야 국제기구 또는 INGO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드레스덴 구상』이 북한의 호응을 얻어 순탄하게 이행되면 이는 곧 남북한 주민들이 직접 한반도 통일 시대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드레스덴 구상』의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통일 친화적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때 우리는 ‘행복한 통일’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I. 서언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통일의 상징 지역인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하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했다. 『드레스덴 구상』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천명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틀 속에서 보다 구체화된 대북정책 제안이다.

『드레스덴 구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3대 대북 제안을 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으로 남북 간 신뢰를 쌓고, 영유아 및 산모 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담고 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의 구축이다.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및 산림을 동시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남북 간 신뢰 축적에 따라 향후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 교통·통신 등 가능한 분야의 북한 인프라 건설 투자와 북한 지하자원 개발(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 결합), 남·북·러, 남·북·중 협력사업,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한다.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이다. 남북 소통과 통합을 위해 역사 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하여 순수 민간 접촉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원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 지원, 통일미래 세대 교육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드레스덴 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정책의 이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통일대박’ 언급과 2월 25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 비핵화 원칙과 신뢰구축 노력의 병행을 천명한 가운데 북한 당국의 즉각적인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이는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의 3대 제안 자체에 반발하고 있기보다는 북핵 문제와 북한체제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드레스덴 구상』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남북한 신뢰구축의 프로세스가 작동되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배경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드레스덴 구상』의 이행·실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정책수단을 제안하고자 한다.

## Ⅱ. 「드레스덴 구상」의 배경과 의미

### 1. 「드레스덴 구상」의 배경

#### 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 화해와 협력이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정착되면서 경제교류가 주된 정책수단으로 등장하였으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는 신뢰라는 무형의 인프라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키워드로 ‘신뢰’가 사용된 것은 박근혜정부가 처음이다.

이는 과거 대북정책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포용, 원칙, 전략적 인내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따라서 강경과 온건, 대화와 안보 같은 과거의 이분법적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강경할 때는 더 강경하게, 유연할 때는 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정리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인 것이다.

기존 대북정책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 경제적 압박이 필요한가와 같은 정책수단을 둘러싼 논의가 주된 관심사였으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정책수단이 안정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책수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수준에 맞는 대북정책수단과 남북관계(경협 규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전의 국가·정치 중심의 접근에서 사회·경제 중심의 기능주의 접근으로 전환된 것 못지않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 역시 기존 대북정책과의 차이점이다. 과거 통일한국의 비전으로 세계 중심국가나 경제대국과 같은 국가 차원의 거창한 비전이 제시되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행복한 통일’은 통일을 개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관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정서적, 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해 내적 연결성의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핵문제에 모든 것을 연계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닌 핵문제 해결 이전에라도 대화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정한 위기는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도발로 인해 남북대화가 단절되는 것이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고 할 정도로 대화 노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이다. 대화 없이는 신뢰를 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많은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신뢰가 없는 현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신뢰가 축적되어 높은 수준의 신뢰가 형성되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평화협정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반짝 효과를 노리는 무리한 정상회담이나 대규모 대북지원은 오히려 신뢰구축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신뢰 수준에 맞지 않는 이벤트성 사업은 남북관계가 진전된 듯이 보이게 하지만 머지않아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련의 검증된 행동을 통해 벽들을 쌓듯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체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북한의

도발과 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계속하면서 호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통일준비와 짝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 대북정책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는 분단관리와 통일준비의 이분법적 논쟁을 끝내고 양자의 조화로운 병행추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요란한 구호나 거창한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인위적 차별화나 이벤트성 사업으로 관심을 끌지도 않고 있다. 이는 신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에서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부터 나왔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회고하면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남북관계 양상의 근본 원인은 상호간 신뢰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 대결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는 불신의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남북 간 신뢰 형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남북관계 발전이다. 대결과 불신의 악순환을 반복해 온 남북관계를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이다.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결에서 벗어나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협력 관계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셋째, 통일기반 구축이다. 남북한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한민족 전체와 세계인의 지혜를 모아서 평화통일에 이르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추진 원칙·추진 기조>

구 분	내 용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 발전</li> <li>▪ 한반도 평화정착</li> <li>▪ 통일기반 구축</li> </ul>
추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있는 접근</li> <li>▪ 진화하는 대북정책</li> <li>▪ 국제사회와의 협력</li> </ul>
추진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정책 추진</li> <li>▪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 쌓기</li> <li>▪ 북한의 '올바른' 선택 여건 조성</li> <li>▪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li> </ul>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세 가지 추진 원칙에 입각한다. 첫째, 균형있는 접근이다. 과거 대북정책은 강경과 유화를 오갔으나, 강경과 유화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강경책의 장단점과 유연책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장점은 유지·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균형은 강경과 유화의 균형뿐만 아니라, 안보와 교류협력 간의 균형, 남북대화와 국제공조의 균형, 협상과 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을 포함한다.

둘째, 진화하는 대북정책이다. 한국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남북 간 공동발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전개되는 상황에 맞춰 대북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대북정책의 진화는 이전 정부와의 전면적인 단절과 인위적 차별화가 아니라 단점은 보완하되 장점은 살리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신뢰구축 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와 추진방향 아래 시행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도발 위협 속에서도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가? 당국 간 남북관계의 진전 전망은 단기간 내에 회의적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이 없다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 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한 것만으로도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적 갈등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남북 당국 간 대화나 신뢰구축의 성과는 없었지만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도 북한에게 더 많이 돌아감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이미 가동되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 나.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한마디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과거 통일논의는 통일 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통일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으나, 통일대박론은 편익 중심의 통일논의를 선언한 것이다. 요컨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통일을 기회와 희망으로 보는 긍정적 통일담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통일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며, 경제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해결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와 경제난이 해결된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에서 과거와 구분되는 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 정치, 경제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개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데 있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함으로써 주변국 국민들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제시하면서 세 분야로 나누어 세부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에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이다.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남북경협 확대는 한계가 있다. 북핵과 민족공동체의 양립은 불가능하다.

둘째,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문제나 핵문제와 관계없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야한다. 또한 학술, 종교, 스포츠 등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유럽 NGO와 한국 NGO가 힘을 합쳐 농업, 축산 지원을 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은 남북한 주민들 간 동질성을 회복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통일한국의 미래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통일시대 기반 구축은 국제협력 없이 불가능하다. 정상회담부터 공공외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남북통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대표적인 국제협력 노력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통일기반 구축,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선언 등에서 나타난 적극적 통일 의지는 바로 『드레스덴 구상』으로 이어졌다. 『드레스덴 구상』은 통일 의지가 담긴, 통일을 내다본 대북·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을 펼치겠다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신념에 입각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시대는 남북 간의 신뢰가 쌓여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며 통일기반이 구축되면 열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올바른’ 방향 선택이 요구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올바른’ 선택 여건 조성을 추진기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남북한의 호혜적 교류 협력을 통해 동질성을 높여나가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진화하는 정책이다. 즉 북한이 먼저 변화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와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의 정책도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드레스덴 구상』은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실천적 제안으로 나온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가장 구체적으로 집약된 것이다.

## 2. 「드레스덴 구상」의 의미

### 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호혜적 교류협력 확대·심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추구,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드레스덴 구상」은 이러한 과제들 중 정책 우선순위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에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제안하였다.

특히 ‘민생 인프라’ 구축은 남북한 호혜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려는 적극적인 실천 과제로 접근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 기반 구축의 일환이다. 북한에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협력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민생 인프라’ 구축은 일회성이나 이벤트식 교류협력이 아닌 지속가능한 민생 지원의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을 지향하는데 의미가 크다.

「드레스덴 구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3대 제안 이외에도 남북한이 유엔과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면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도를 통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발전의 선순환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릴 경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투자 유치를 한국이 적극 지원하고,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하여 북한 경제개발과 주변 지역의 경제 개발을 도모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안보 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추진을 약속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드레스덴 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선순환 발전시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 기반 구축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북한의 변화를 지향하는 구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나. ‘통일대박론’에서 ‘통일준비론’으로 진화

『드레스덴 구상』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 통일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통일대박론’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 발전, 북한 변화, 한국의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동북아 공동번영 등을 포괄하는 한반도 통일의 편익을 중심으로 한다. 드레스덴은 베를린 장벽 붕괴 5주 후인 1989년 12월 19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서독총리가 방문, 동독 주민들에게 통일 추진을 약속하는 정치적 의지를 밝힌 도시였다. 이 지역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것은 독일의 경우처럼 한반도도 통일을 이뤄야한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이 외교적으로 고조된 시기는 지난 20년간 드물었다. 따라서 『드레스덴 구상』은 통일준비의 국내외적 지지와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대북·통일 정책이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되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역점을 두었다고 본다면, 『드레스덴 구상』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넘어 통일시대를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다.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 교류협력이 일회성 또는 이벤트식이 아닌 남북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임을 전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시 독일 측 인사들은 독일 통일은 서독의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hrung)’ 정책에 입각한 일관된 대동독 교류협력의 추진과 동독 주민의 선택의 결과임을 강조한 바 있다.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 변화를 외부로부터 강제하기 보다는 북한이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면서 남북 간 신뢰구축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드레스덴 구상』의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사업’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접촉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북한 주민들의 자생력을 높여주면서 스스로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 농업, 축산 및 산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은 일시적인 식량 지원이 아닌 식량 생산능력의 구축을 통해 식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사업은 남북 당국 및 주민 간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호 소통 및 이해의 증대를 통하여 신뢰 축적을 기대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모자 패키지(1,000 days) 사업’ 역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접촉 기회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 라.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통일 준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통일과정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가 모두 ‘윈-윈(win-win)’하도록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드레스덴 구상」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드레스덴 구상」은 주변국과 조화를 이루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으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통일외지를 표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북한의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로 발전시킬 것을 북한 측에 제안하였다. 또한 DMZ 세계평화 공원이 한반도 긴장완화로부터 통일, 동아시아의 화합, 21세기 실크로드 건설 등으로 이어져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및 공동번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마. 통일을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

「드레스덴 구상」은 독일이 통일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강국으로 거듭나면서 역사의 진보를 이룬 것처럼, 한반도 통일도 그러한 역사발전을 이룰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 또한 통일은 ‘Glücksfall’, 즉 대박이라고 언급,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드레스덴 구상」의 실천을 통한 통일시대의 준비는 신뢰에 바탕을 둔 남북 경협으로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제2의 도약’을 향한 활로의 개척을 기대할 수 있다.

### Ⅲ. 「드레스덴 구상」 추진 방향

#### 1. 기본 방향

##### 가. 실천 가능한 통일정책

「드레스덴 구상」이 앞으로 실천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호응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사실상 거부선언을 하였지만 「드레스덴 구상」이 포함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건설 관련 사업은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남북 동질성 회복과 관련된 사업들을 포함하여 「드레스덴 구상」을 전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당장에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자신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려고 한다거나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는 사업들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 우선 지원은 정치상황과는 무관하게 대북지원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평화통일은 남북한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기반의 구축을 통하여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정권이 호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서 작동 가능한 통일정책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드레스덴 구상」을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가는 이행방안이 요구된다.

##### 나.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드레스덴 구상」이 일단 부분적으로나마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흐름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한국의 대북정책은 남

남갈등의 근원으로 작용하였다. 우리 사회 내 전반적인 공감과 동의 없이 추진된 대북정책은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저항 속에서 지속되지 못했다.

따라서 서독의 대동독 정책에서 살펴보듯이 한국의 통일정책도 우선 북한 정권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한국 국민의 동의와 호응을 고려해야 한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통일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과 인위적 차별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같은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 주민의 민생 회복을 도와주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나가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다. 남북한이 함께하는 통일정책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합의하여 이루는 평화통일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남한이 주도하여 북한을 병합하는 흡수통일은 고비용과 후유증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동독의 경우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실시된 선거에서 동독인들이 서독과의 즉시 통일을 선택한 결과로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도 북한 당국과 주민으로 하여금 남북 합의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상식과 인류보편의 공통적 가치를 이해하고 남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좋을 때 북한이 호응하고 합의하는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드레스덴 구상」이 제안한 인도적 지원, 인프라 건설, 동질성 회복은 합의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 평가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하여 눈을 뜨고 귀를 열면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체감하면 남북 간 신뢰가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할 것이다.

#### 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정책

한반도의 통일과 한민족의 통합은 주변 열강의 동의와 지지 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남북한이 한반도 통일의 당사국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원하지 않는 통일 노력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고 한반도 통일의 편익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작업은 우리 통일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더구나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변화를 추구할 때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통일기반 조성은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미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남북경협을 주장한 바 있다. 「드레스덴 구상」은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부합한다.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의 구축은 나아가 동북아의 공동 발전 추진과 동반하는 것이다.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 등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것이다. 요컨대 「드레스덴 구상」의 추진 방향은 한국이 국제사회를 한반도 통일의

적극적 동반자로 여기면서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국제 행위자와 함께 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 〈고려사항〉

### □ 북한의 수용성

『드레스덴 구상』은 대북정책에서 통일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더불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기반하면서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드레스덴 구상』은 인도적 지원, 인프라 건설, 동질성 회복이라는 주요 제안을 통하여 통일 비전을 북한뿐 아니라 국내와 국제 청중에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북한 당국이 ‘분리’와 ‘고립’에 대한 우려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북한의 수용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 기대된다. 그와 함께 북한이 우리의 통일정책이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 흡수통일이 아닌 합의통일을 지향한다고 이해하게 된다면 일방적인 통일 노력이 아닌 쌍방이 함께하는 통일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 □ 북한 주민

『드레스덴 구상』의 주요 제안은 북한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서독과의 통일을 선택한 결과였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현 시점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작업은 통일기반 조

성에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이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을 품는 노력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한 정부와 민간 단체의 노력은 남북한이 합의통일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비록 『드레스덴 구상』에 대하여 북한이 사실상 거부를 표명했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안은 유효하며 이러한 북한 주민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일관되게 제시할 경우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기대와 호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다양한 청중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드레스덴 구상』은 다양한 청중을 상대로 우리의 통일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천명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이러한 구상을 한국이나 북한이 아닌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룬 독일에서 발표한 점은 한국정부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통일정책은 국내, 북한, 국제사회라는 다양한 청중을 고려한 내용을 일관되고 조율된 방식으로 담도록 해야 한다. 이번 구상에서와 같이 북한은 당국과 주민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변국과 EU 등으로 나누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청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통일정책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과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 □ 북핵문제

인도적 지원과 별도로 북한 당국에 대한 핵포기 요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고려할 때 북한 핵포기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목표이다. 특히, 일본의 재무장과 중·일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 심화는 일본과 주변국의 핵개발 및 예방 조치를 부추길 우려가 농후하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한·미와 한·미·중이 ‘제2의 드레스덴 구상’을 통하여 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하여 핵포기를 할 경우 경제건설과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드레스덴 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기본 방향과 일치한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북한은 핵개발 포기와 관련한 외부 세력의 약속을 더욱 불신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앞으로 주변국, 특히 미·중과 더불어 핵포기에 따른 경제와 안보 공약을 마련하여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더불어 제시하는 ‘제2의, 제3의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이 쉽게 거부하기 힘들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 당국이 이러한 제안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로 하여금 남한과 국제사회의 의지와 계획이 점차로 알려지게 되어 엘리트 혹은 아래로부터의 북한변화를 추동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 <3대 제안> 실천방안

### 가. ‘민생 인프라’ 구축

#### (1) 의의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민생 인프라’는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은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협력하는 데서 시작된다.

‘민생 인프라’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은 전통적인 국가안보 차원의 접근을 넘어 가난(기아 및 식량난 해결), 전염성 질병, 인권, 여성 및 아동의 권리, 생태환경 보호 등의 인간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인간안보’ 개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인간안보’는 북한 정권의 북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 해결 의지 및 역량 부재 상태를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생 인프라’는 일회성이나 이벤트식 교류협력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민생 지원의 제도적·체계적 메커니즘 구축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민생 인프라’는 전통적 개념의 인프라인 교통, 통신 분야 등을 포함하여, 북한 주민의 민생과 안정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주민 생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농·축산 및 산림 분야의 공동 개발 등을 포괄하게 된다. 무엇보다 먼저 ‘민생 인프라’는 북한의 의식주 생활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은 남북한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대북지원의 효과를 추구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우리 한국에 대한

희망을 주고, 통일 동반자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 (2) 비전

대북 ‘민생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구축, △한반도 통일시대 초석 마련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함께 신뢰에 바탕을 둔 남북 경협으로 북한 주민의 민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제2의 도약’을 향한 활로 개척이 가능하게 된다.

‘민생 인프라’는 ‘통일 지향형’ 지원이다. 즉, 북한 변화 유도, 인도주의적 협력, 목표 지향형 지원, 국제사회와 협력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 인프라’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민생 행복’과 일맥상통한 점에서 대북, 대내, 국제적 차원의 비전 제시로 부각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신장지구를 방문하면서 ‘신장자치구의 안정에 있어 경제발전과 취업 기회의 증가,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민생 인프라’는 △한국 민생, △북한 민생, △중국 민생(惠民)과의 상호 연계 속에서 ‘국민(주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서 ‘행복한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다.

‘민생 인프라’는 ‘국제협력 유도형’ 지원이기도 하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강화를 강조한 통일한국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부합된다. 한국 국민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행복, 나아가 중국 등 역내국가의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생’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통일한국 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부감 해소

도 기대된다.

북한 ‘민생 인프라’는 대북 식량 및 비료, 의약품 등을 비롯한 단순 구호품 형태의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북한 주민들이 농업·축산업 등 분야에서 식량 증산과 함께 보건의료 인프라의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민생 인프라’를 통해 신뢰에 기반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인프라 건설 투자 등을 통해 남북한 호혜적 발전 속에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남북한, 중국, 러시아)의 공동 발전 추진도 가능하다.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기대된다.

### (3) 추진 방안

우선 당면 과제로 북측의 호응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실행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INGO의 동참 아래, 대북 인도적 지원체계 구축 및 추진이 요구된다. 소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제의(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비공식적) 주도 하에,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추진해온 INGO와 국내 NGO의 연계 속에서 의약품 및 여성·아동 대상의 긴급지원 제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종교단체의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 허용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2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결핵환자를 비롯한 전염성 질병에 대한 북한 당국의 속수무책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차원의 지원 제의도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북한 당국의 정책 목표에도 부응하는 농업 분야 협력의 우선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농업생산 증대를 2014년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3년 가을에 지정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중 2개(함남 북청, 함북 어랑)는 농업개발구이며, 또 다른 2개(평북 압록강, 자강 만포)도 ‘현대농업’을 개발 대상에 포함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함경남도 북청은 임산 자원이 풍부한 데다 해안을 따라 평야지대를 끼고 있으며 양돈 등 목축업도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입지 선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 경우 농업협력에 관한 과거 당국 간 합의내용(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및 2007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농수산분과위원회 합의사항)도 반영되어야 한다.

### **【북한 호응 유도를 위한 단계적 추진】**

#### **〈제1단계〉 농업 및 축산업의 남북협력 제의·추진**

우선 북한 민생 지원의 최우선적 과제는 주민의 ‘먹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북한 농업 지원은 단순한 쌀·비료 지원 방식이 아닌, 북한 식량 생산의 자생력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① 농업 부문 지원 품목
  - 비닐하우스 자재 및 경운기를 비롯한 영농기구 지원
  - 비료증산을 위한 북한 비료 공장의 개·보수 협력 방안 제의
- ② 축산 부문 지원·협력
  - 한국 축산업의 과포화 상태 해소와 북한 육가공업 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제의가 바람직함.
- ③ 산림 공동 개발 문제
  - 산림 개발은 북한 시범 지역의 '식목(나무심기)' 사업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이는 에너지 문제의 해결 없이 효과를 기할 수 없는 사안임.
  - 그러나 산림 개발이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보장하는 바, 북한 당국에 적극적인 설득으로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산림 공동 개발 사업을 제의·추진할 필요성이 큼.

\*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한 교토의정서 가입국으로 2015년까지 탄소(Co<sub>2</sub>)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연기한 상태인데, 북한 지역의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에 매우 긍정적인 사업 대상임.

## □ 북한 지역의 시범적 '복합농촌단지' 조성

북한의 농업·축산 및 산림 공동 개발을 위한 북한 특정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범적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

### <복합농촌단지 추진 방안>

- 농업생산 및 생산성 증대만이 아니라 농촌 생활환경 및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사업 함께 추진
- 단순 물자 지원이 아니라 남한 및 국제사회 관계자들이 북측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인력 및 기술 교류사업이 되도록 추진
- 대상지역에서 여러 분야 사업을 서로 연계하는 패키지형 개발·협력 실시
  - 생산 증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작물 및 축산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종자 개량, 농자재 및 농기계 보급, 관개시설 및 축사 시설 건립 등
  - 산림 녹화: 사방 및 조림사업, 양묘장 조성, 연료림 조성 등

- 생활환경 개선: 지하수 개발 및 상수도 보급, 농로 및 주변 도로 개량, 농촌 주택 개량
- 보건의료: 지역 보건소 및 의료시설에 의약품 공급 및 장비 지원, 예방의학 및 진료체계 개선 사업
- 북측 협동농장과 남측 단체·기관 및 국제기구·INGO 등 다양한 사업주체 간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
  - 북측 조직과 남한·국제사회 조직 간 실질적인 공동 추진체계를 확립
  - 남북 간 정치적 관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내 민간단체와 유엔 기구·INGO를 활용하는 간접적 협력을 추진
  - 유엔 기구와 INGO 및 국내 민간단체는 이미 농업 및 보건의료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들 중 유력한 단체들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보다 업그레이드된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추진
  - 남북관계가 충분히 개선될 경우 당국 간 협력채널을 정식으로 가동하여 우리 정부·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협력조직을 구축하고 사업 규모의 대형화를 추진
-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은 북핵문제 해결 진전과 경직되게 연계하지 않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에는 소규모 간접 지원 사업에서 출발하여 점차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규모 확대
- 사업 대상 지역은 북한의 저소득 지역 및 경제특구·경제개발구 부근의 선정이 바람직
  - 북한 정권보다 주민의 이익을 앞세우며,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적용
  - 평양 주변 지역 대신, 식량사정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방 농촌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 북한 주민의 외부 접촉 확대를 유도
  - 이와 함께 북한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북한의 개방정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 농업개발구(북청, 어랑)와 개성공단, 신의주, 나진·선봉 등을 주요 후보지역으로 검토

□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 국제기구 및 INGO’ 컨소시엄 구성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1단계> 추진 방식부터 농·축산 분야 전문 국제기구 또는 INGO와 국내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에 평양 주재 국제기구 및 INGO, 북한의 관련 분야 담당 기구의 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 〈제2단계〉 당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신뢰 조성에 따라,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특구 개발 관련 금융, 조세관리 등에 대한 지원·협력의 단계로 나아간다. 북한 미래세대 교육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제3단계〉 핵포기 결단 시, 본격적인 대북 개발협력 추진

핵포기 결단에 상응하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개발 협력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창설, 북한 안보협력을 위한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 추진 등의 본격적 개발협력이 가능해진다.

현 국면에서는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1단계> 추진 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접근이 절실하다. 대북정책의 방향과 역량을 <제1단계> 추진에 결집해야 한다. 북한 ‘민생 인프라’는 ‘민생 - 정권’에 대한 분리형 접근이 특징인 바, 북한 정권과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민생지원 지속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추진 과정에서 대북 민생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민생 인프라’ 구축은 북한 주민의 절박한 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통일준비 차원에서 남북공동체 형성은 물론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

및 대한민국의 활로 개척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유보 국면에 북한의 대남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과시할 수 있는 대북 신뢰 조치를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은 북한의 호응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인 바, 『드레스덴 구상』의 실천을 위해 반드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드레스덴 구상』의 실행을 위해서 5·24 조치의 공식적 해제 언급은 불필요하다. 5·24 조치와 무관한 남·북·러 3자 협력 등의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북측의 호응 수준에 따라서 5·24 조치의 관련 사안들을 점진적, 비공식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오판과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공식적·비공식적 차원의 대북지원·협력 의사의 ‘시그널’을 단계적으로 보내야 한다.

## 나.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레스덴 구상』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모자 패키지(1,000 days) 사업’을 제안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민간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 지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였다. 다만 2013년 한 해 민간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51억 원으로 그 규모가 늘지 않았다.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기본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소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확대를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와 긴밀히 연계하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선제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에 동의한다면 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사무소와 같은 상설기구의 설치 문제는 복합농촌단지나 ‘모자 패키지(1,000 days) 사업’과 같은 구체적 사업 착수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먼저 이끌어내고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유의미한 남북한 접촉을 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전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대북 직접 지원보다는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북한의 산모와 유아를 위한 ‘모자 패키지(1,000 days)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유니세프(UNICEF)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산하기구가 그동안 북한 지역에서 벌여온 영양조사 및 구호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모자 패키지(1,000 days) 사업’은 ‘남북한+국제기구+INGO’ 컨소시엄의 대북사업 협력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개방을 한 걸음 더 이끌어내는 데도 유용한 계기를 작용할 것이다.

『드레스덴 구상』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보고서에 대한 입장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조사사무소는 한국에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다.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 양자 차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COI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지지는 다자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저항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드레스덴 구상」 중 인도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부각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COI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력 과정 속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협조 사항을 지지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와 체제선전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활용, 국제사회에 남북 이산가족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 ②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문제 접근의 차이를 부각, ③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한국 정부의 제안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동질성 회복

남북 주민 간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접촉과 화합의 기회를 가급적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수 민간 접촉의 증대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접촉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드레스덴 구상」 실천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

민간 접촉의 확대는 정부는 기본 지침만을 규정하고, 민간의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민간 접촉의 확대 과정에서 대북 ‘진입’ 비용 지출은 규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단의 ‘발전적 정상화’ 추진처럼 민간 접촉도 북한의 일방적 방식이 아

닌 상식과 일반적 교류 규범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남북 민간교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역사연구 및 보전’을 위해서 고대사, 언어학, 고대 미술품 및 민요, 민속놀이 등 민족 문화유산 공동연구 및 보전 등을 시작해야 한다. ② ‘문화예술’의 경우 고대미술품 및 민속자료 교환 전시, 순수예술 및 민속예술단 상호 교환 공연, 남한의 한류 그룹과 북한의 현대 공연단(모란봉 악단) 교류 공연 추진 등이 가능하다. ③ ‘스포츠’는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상대방 초청 및 참가, 남북 축구, 농구 대표단 교환 경기 추진 등이 있다. ④ ‘기초학문 및 순수학문’은 기상, 지진, 생태계, 수자원·어족자원 등에 대한 연구 자료 교환이 가능하다. ⑤ ‘방송’의 경우 민족문화유산, 자연환경, 동식물 관련 다큐멘터리 등 비정치적 프로그램의 상호 교환 및 상영 등이 고려 대상이다.

동질성 회복 분야는 남북 교류가 여러 분야에서 증대 추세를 보인 2000년대에 각종 교류를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추진한 것을 반복하지 말고 남북 상호주의에 기초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따라야 한다. 북한의 호응 및 이행 수준에 따라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남북합의 관련 기념일에 공동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사를 가질 경우 남북 대표단은 쌍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수 민간 접촉의 쌍방 지향적 방식이 순조롭게 확대될 경우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지방자치 단체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만남과 교류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 IV. ‘행복한 통일’

### 1.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드레스덴 구상』이 북한의 호응을 얻어 순탄하게 이행되면 이는 곧 남북한 주민들이 직접 한반도 통일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드레스덴 구상』이 담고 있는 3대 요소, 즉 대북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 그리고 동질성 회복 노력 등의 제안은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통일시대를 준비해가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레스덴 구상』을 단순한 대북 제안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과 국내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남북 동질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호혜적 협력이 시급한 과제이고, 그와 함께 국내적 차원에서는 통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 가.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호혜적 협력

남북관계 차원에서 동질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문화적 교류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회·문화적 교류는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들 간의 접촉 빈도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장기화되고 있는 경색 국면을 고려할 때 남북한 주민들

간의 접촉을 단기간에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남북한 내부에 확산함으로써 간접적 접촉 경험을 늘여 나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확산하고 축적해 나가야 한다.

남북 교류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스포츠 경기, 남북 공동의 역사연구, 관광지 개발을 위한 조사작업 등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채널을 가동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촉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류사업의 경우 대중매체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교류의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성이 인정된다. 특히 이러한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는 민간 분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부는 이를 용인하면서 측면 지원에 그치는 ‘능동적 방관’의 형식을 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북핵문제 해결 논의가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비정치적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와 특히, 민간 분야의 교류협력 방식은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질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호혜적 협력이 진행될 경우 『드레스덴 구상』의 ‘민생 인프라’ 구축 작업도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 즉, 호혜적 협력정신에 바탕을 둔 ‘민생 인프라’ 구축 작업을 펼칠 때만 이 구상이 일회성의 시혜적 대북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드레스덴 구상』의 구현 방안은 한국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자원, 노동이 결합하는 남북협력의 방식을 통해 남북한 공동번영의 초석을 다지자는 데 인식의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남북한 사이의 ‘윈-윈(win-win)’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드레스덴 구상』이 이행될 때 북한 주민의 민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제2의 도약’을 통한 ‘통일대박론’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언급한 대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 나. 통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통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드레스덴 구상』을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통일을 ‘부담’이나 ‘비용’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가능성’이나 ‘편익’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하면서 미래지향적 통일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흡수통일론’으로 규정하고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드레스덴 구상』은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합의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때 북한이 호응하는 방식의 합의형 통일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이다.

따라서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 내용을 우리 사회에 폭넓게 확산시키는 것이 통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통일을 정치경제적 영역, 즉 하드웨어적 영역 일변도의 접근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영역, 즉 소프트웨어적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통일을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닌 구체적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도

록 해야 한다. 특히, 만성적 청년 실업과 극심한 취업 경쟁에 노출되어 통일 논의 자체에 대한 기피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 게 보다 현실적인 통일 담론의 제시가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드레스덴 구상』의 남북협력 제안과 통일 친화적 사회를 연결시키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11월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대 중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31.6%로, 40대(14.9%)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태로 한 세대 정도가 흐른다면 여론 주도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분위기가 통일 적대적인 것으로 흐르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통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를 통해 통일 이후의 미래상을 보여줌으로써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통일을 기회와 희망의 계기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통일 이후의 미래상을 몇 가지 통계적 추산에 의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오히려 통일 이후 예상되는 갈등과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분석하며 차별하게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이나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시민정치교육을 강화하는 일도 통일 이후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일 친화적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는 ‘무형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인 동시에 ‘제도의 통합’ 못지않게 중요한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일이다.

## 2. 통일비전과 국민행복

박근혜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내세우며 출범했다. 지난 정부에서 ‘글로벌 코리아’라는 국정목표 아래 하위 국정과제로 북핵문제 해결 등 대북정책 관련 공약을 언급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정 우선순위에서 통일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제시한 세 가지는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인도적 문제의 해결은 통일 이후 맞닥뜨리게 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 즉 인간안보(human secur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영유아에 대한 충분한 영양 공급과 같은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 확보되지 않거나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욕구(basic human needs)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통일논의조차 실질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당사자들의 노령화 추세와 함께 시급성이 배가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제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통일을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생 인프라’ 구축은 통일 이후 예상되는 남북한 격차를 줄임으로써 ‘준비 안 된 통일’이 가져올지도 모를 위협과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과거 다양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면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지속성 확보에 실패했거나,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교류를 위한 교

류'에 그쳤을 뿐 명확한 통일지향성을 갖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내 '민생 인프라' 구축사업에 남북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대남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이는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인식의 격차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작업은 통일 이후 정치경제적 통합은 물론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뤄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들이 가진 정체성 인식의 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일은 북핵문제 등 정치적 난제 해결 이전이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대두된다. 북한 주민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추도록 독려하는 작업도 물론 필요하다.

이처럼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제시된 대북 제안은 단순한 대북 제안을 뛰어넘어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드레스덴의 3대 제안의 이행과 함께 통일논의의 확산이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가게 될 것이다.

## V. 결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난 1년여간 조용하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불확실성 속에서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도발위협 등의 안보 위기를 잘 관리해왔다. 둘째, 원칙있는 신뢰구축 노력을 통해 폐쇄위기에 몰린 개성공단을 살리고 공단의 국제화도 이끌어냈다. 셋째, 북한의 대화공세나 국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정속도를 유지하였다. 과속하거나 정체되지 않으려고 했다. 넷째, 미국, 중국, 러시아, EU, ASEAN 등 국제협력을 강화했다. 다섯째, 15년 만에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에 포함시켰고, 통일대박론을 통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실천 과제의 시행을 선언했다. 여섯째, 남남갈등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전략과 세부실천 과제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를 대내, 대북, 대외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상당히 해소되었고,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대북정책의 과제들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추진방향이 분명해졌다. 이제 대북정책은 이러한 과제들을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대북정책의 실질적인 가동이 기대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단계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정책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열어 놓으려는 데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통일의 비전에서 아시아의 허브, 일등국가, 세계 몇 위의 경제대국 같은 거창한 구호 보다 ‘개개인의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 남북관계도 상식과 원칙 위에서 차근차근 풀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뢰가 축적되면, 남북관계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그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신뢰 축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첫째 대북정책은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였다.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최대 도전인 동북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해결, 통일 공감대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협력을 도모했다.

2차년도인 올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인 가동이 기대되었으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으로 상황이 불투명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덴 구상」의 ‘민생 인프라’ 구축 노력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의 가시적 성과를 얻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을 위한 이론화와 공론화 작업을 통해 국민여론의 결집이 필요하다. ‘통일대박’ 역시 대북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 여론을 결집하고 이끄는 등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튼튼한 안보 태세의 확립 위에 급변대비와 함께 주변 환경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통해 ‘행복한 통일’로 한 걸음 다가가야 한다.

부록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전문

- 날짜: 2014. 3. 28.
- 장소: Dresden University of Technology (독일 드레스덴 공대)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존경하는 한스 뮐러 슈타인하겐 총장님과 드메지에르 전(前) 총리님,  
그리고 드레스덴 공대의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독일의 명문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 드레스덴은 구 동독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지역으로 분단극복과  
통합의 상징입니다.

독일 민족은 이곳 드레스덴을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하고, 풍요로움이  
넘쳐 나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현실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드레스덴은 용기와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드레스덴에서 하나 된 독일의 오늘과 분단 70년을 앞둔  
한반도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역사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를 둘러보며, 이곳이 바로 국가의 장래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이 다리를 잇고, 교육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는 드레스덴 공대의 교육이념이 드레스덴 공대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 구현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대학시절 전자공학을 공부한 공학도로서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초석이자,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 후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 만들고,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창의성과 혁신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저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 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과 결합하여 경제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그것이 창조경제입니다.

또한 드레스덴市와 같이 학교, 산업,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창조경제가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드레스덴市와 대학의 발전은 창조경제를 향한 우리의 노력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과 독일은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87불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독일에 건너와 광부와 간호사로 조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하려고 해도 동북아의 작은 나라, 더욱이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에 어느 나라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암울한 시기에 독일은 한국에게 차관 1억 5천만 마르크를 제공하였고, 선진기술과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도움은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을 방문하셨던 한국의 대통령은 2차 대전의 폐허를 극복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기적을 한국에서도 이룰 수 있다고 생

각하셨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고, 독일의 철강 산업을 보면서 우리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우토반과 같은 고속도로를 놓고, 철강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가서 고속도로와 제철소를 만들려고 하자, “다닐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고속도로 건설은 실패할 것이다”라는 반대에 부딪혔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제철소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된 고속도로는 이후 한국 경제성장에 탄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해 물류와 유통의 숨통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철강과 자동차 산업은 지금 세계 5, 6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0년 전 차관조차 받기 어려웠던 나라가 이제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독일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독일의 신뢰와 믿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의 청년 여러분!

독일인과 한국인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독일과 한국은 모두 2차 세계대전 후 나라가 둘로 나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들은 암담한 현실에 좌절하기 보다는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두 나라의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국가를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한국은 뒤이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아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독일 통일도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통일과 통합과정에서 독일인들의 담대한 용기를 기억합니다.

그토록 높아 보였던 베를린 장벽도 동서독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통일을 향한 동서독 주민들의 오랜 노력은 마침내 독일 통일이라는 큰 꿈을 이루게 했고, 나아가 유럽의 미래마저 바꾸었습니다.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통일 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 드레스덴은 통일 후 세계적 첨단 과학 도시로 발전했고, 다른 구 동독지역들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통일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 더욱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유지와 핵 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외신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

니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후 아직 생사도 모른 채,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남북 이산가족들 역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남북한 간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막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이 있습니다.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불신의 장벽’도 쌓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오랜 기간 살아온 남북한 주민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사이에 놓인 ‘사회 문화적 장벽’도 높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 간에 조성된 ‘단절과 고립의

장벽'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이 단순히 하나의 영토, 하나의 체제를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도 통일 이전 동서독 주민 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기에 통일 직후 후유증을 빠르게 극복하고 현재와 같이 통합된 독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합니다.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합니다.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합니다.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할 가족 간의 만남조차 외면하면서 민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이면 헤어진 지 70년입니다.

평생 아들딸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가족들의 안부라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다리다가 작년에만 한국에서 3천 8백여 명의 이산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측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 동서독은 이산가족 등 분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방문을 허용했고, 꾸준한 교류를 시행했습니다.

남북한도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으로 가족들의 한을 풀고 동시에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발전을 이뤄갈 것입니다,

대북 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농업 및 산림사업 경험이 많은 독일 및 유럽의 NGO 등의 동참, 그리고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현재 남북한 간에는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  
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  
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  
입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분단된 한반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휴전선과 그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DMZ)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 남북한과 UN이 함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DMZ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철조망과 지뢰를 걷어내고 생명과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랍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 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 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같이 번영하는 길이며,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주변국과 조화롭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으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저는 곧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통일과정과 통합과정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드레스덴 시민과 학생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평화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왔습니다.

독일이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서 위대한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듯이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진전이 동쪽 끝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었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존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의 교정에서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된 독일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남북한 청년들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함께 공부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날엔 독일과 한반도의 젊은이들,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라시아 열차로 아시아와 유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보다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여정에 독일인 친구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민족이다)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 되어 부른 뜨거운 외침이 평화통일의 날,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진정한 친구 독일과 드레스덴 대학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보고서는 제1차 KINU 통일포럼(2014.4.30) 결과를 바탕으로 조민 연구본부장을 비롯하여 김석진, 김진하, 성기영, 정성철 연구위원 등이 수정·보완 작업에 참여하였다.

제1차 KINU 통일포럼은 박영호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형중 북한연구센터 소장, 박종철 남북통합연구센터 소장, 전병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조한범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상 통일연구원)과 홍용표 통일비서관,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등 정부 관계자, 김호섭 교수(중앙대), 유희열 교수(고려대), 고유환 교수(동국대), 구본학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 김흥규 교수(아주대), 김병연 교수(서울대), 이석 연구위원(KDI) 등이 참여하였다.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회 편	16,5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 통일정세분석

### 비매품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문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대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근,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박형중, 임강택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비매출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적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8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2014년 대북정책 추진전략	최진욱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 Study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 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